'희망' 2015 신년 인터뷰

①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

"사람 아닌 가치 중심으로 당 재편돼야"

2015년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에도 매우 중요한 해이다.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빛가람 혁신도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활력이 솟구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일보는 올 한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활약이 예상되고 광주·전남에 큰 영향력을 미칠 인사들을 만나 새해 설계와 지역발전 방향을 들어본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프로필 ▲광주 살레시오 고교 졸업 ▲전남대 법학과 졸업 ▲전남대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제24회 사법시험 ▲사법원수원 13기 ▲법무법인 유러 대표변호사 ▲17·18·19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 이겨
세월호법 등 굵직한 난제 해결
계파 청산 못하면 정권창출 요원
신당은 민주 진영·호남 분열 초래
호남정치 복원 시스템 구축이 해답
개헌안 하반기에 국회 통과 시켜야

'유능제강'(柔能制剛). 부드러움이 강함을 누른다는 뜻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적절하게 상징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굵직굵직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당내 강경파들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당론을 결집시킨 뒤,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역지사지의 논리적 설득으로 '상생의 정치'를 실현시켰다. 밀어 부치는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이해와 소통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빛났다는 평가다.

지난 2일 광양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통의 리더십과 새해 현안, 호남의 현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원내대표를 맡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는다. 소회가 있다면.

▲우선 당을 안정시켜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연말 국회 정상화,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성과를 거둬 보람을 느낀다. 반면, 비선실세 국정 농락 사태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소리 없이 강한 리더십의 원동력은.

▲지난 10년 동안의 의정생활에서 강경 투쟁보다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체득했다. 소통과 설득을 통해 신뢰의 구조를 만든 것이 주효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새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도출된 안을 두고 국회 특위에서 반영해 나갈 것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가 중요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와 군인 및 사학 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오는 4월 이내에 결론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진 뒤, 이를 토대로 군인과 사학 연금 개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결정이 과연 신중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4월 재보선에서의 야권 연대는.

▲과거에도 정치공학적 야권연대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 정체성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같이 가는 것 아니냐. 4월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는 어렵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친노, 비노, 반노 등 분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당이 재편돼야 한다. 당이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계파 청산을 하지 못하면 정권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대 결과에 따라 당이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절차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 창출의 비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과거처럼 총선, 대선을 앞두고 당이 단합에 나설 것으로 본다.

-신당 창당설이 있다.

▲신당이 과연 대안 정당이 되겠는가. 호남과 민주진영의 분열만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호남 정치의 실종에 대한 입장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정치적 공백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가야한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인물도 큰다. 호남 의원들이 소통하고 단합해 신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 의원들의 책임이 크고 각성해야 한다.

-개헌 열기가 식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여당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 지난번 박 대통령 만났을 때,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여당이 정부의 앞잡이가 되고 야당이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개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었다. 여당에서 올해 초부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1월에 개헌 특위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면 상반기 내에 개헌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국회 통과시켜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여야의 합의를 거쳐 3~4년 후로 늦춰도 된다. 박근혜 정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헌의 주요 방향은.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의 기본권, 전반적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권력구조 개편 골자는.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다. 갈등이 많은 나라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가 필요하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외교 전반, 국회 해산권 등 비상 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는 장관을 직접 임명하는 등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개헌이 호남에 미칠 영향은.

▲호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대통령제 등 승자 독식 구조는 호남에 대단히 불리하다. 인구나 경제 등의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면 모든 측면에서 배분과 기회 자체가 왜곡되는 현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본적으로 호남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인데다 지역적으로도 영남 등에 비해 취약한 구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 독점, 자본 독점, 기회 독점 등 3대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방법은 개헌부터 시작돼야 한다. 개헌으로 권력 독점이 깨지면 자본과 기회 독점도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호남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도가 깨지는 것이다.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호남이 정말 어렵다. 죄송하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남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단합, 신뢰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호남 정치권이 부끄럽지 않게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드린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산구 협약 무시 "4급 받아 달라"
해 넘긴 광주시 고위직 인사 또 지연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광주시와 5개 구청의 협약과 관행을 무시한 채, 승진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의 기술직 4급은 시와 5개 구청의 교류 직위(구청 도시국장)로서 지난 2011년 당시 강운태 시장과 민형배 청장 등 5개 구청장이 협약서에 사인한 사항이다. 즉 기술직 4급 승진은 행정직과 달리 자리 수가 한정돼 있는 만큼 시와 구가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협약을 어긴 민 청장의 인사로 인해 광산구와 시의 교류를 비롯한 광주시의 4급 이상 전보 인사가 해를 넘기고 말았다.

광주시는 애초 지난달 30일 4급 이상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산구와 협의를 보지 못했으며, 빠르면 신년 첫 업무일인 2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늦춰져 예정보다 1주일 가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민 청장이 시와 구청간의 협약을 어기면서 비롯됐다. 민 청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들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에 시·구간 공무원 인사교류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상반기 중에 시·구간 인사교류 협약을 상생기조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 청장은 승진인사는 자치구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술직 4급 승진시 시장과 구청장이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서약한 사항을 어긴 점 ▲20여년 동안 관행이었던 부구청장의 시 추천을 무시한 채, 구청장이 정한 4급 직원을 시가 받아줄 경우 시가 내려보내는 부구청장을 받겠다는 입장 등에 비춰보면 과도한 인사 욕심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이 광산구가 애초 입장을 번복할 의사가 없어 인사 차질이 장기화하거나 광산구만 인사에서 제외되는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현안에 대한 광주시 입장'을 내놓고 4급 전보인사를 며칠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산구가 부구청장 인사에 앞서 특정 4급 공무원을 시로 전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2011년 당시 시·구간 인사교류 협약을 지키고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구간 합의를 전제로 한 인사교류 협약과 관행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광산구가 시·구간 협약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특위 금주 가동

증인채택 등 이견 커 난항 예고

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두 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달 29일 구성이 의결됐지만,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허송했다.

두 특위는 금주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행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보니 벌써부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특위 5일, 대타협기구 6일 '킥오프' 추진=여야는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번 주에 출범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으로,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으로 각각 내정됐다.

조·강 의원은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도 겸직, 이르면 5일 첫 회동을 한다. 대타협기구의 다른 의원 2명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은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한다.

◇국조특위 5일 첫 간사접촉…증인채택 공방 예상=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는 5일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생산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 증인의 경우 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